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제안

"시찰단 맹탕 시찰" 정부 압박
국회 청문회 개최도 추진
이재명 "日 해양투기 들러리"
노조 농성 강경 진압도 날 세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검증 부실'을 연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찰단이 어제 시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오염수 방류 장치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분의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며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여당 역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검증 특위'는 설치에 시간이 걸리고 여야 합의가 필요해 그 전이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농해수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6월 7일 관련 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을 주제로 상인 단체·전문가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원전 오염수라기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라며 "이 핵 오염수는 엄밀히 따지면 핵폐기물로, 방류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해양투기를 합리화하며 들러리 서고 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생명 위협 행위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라고 적은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다"며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단다. 약자를 때리라고 힘을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힘을 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 통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태원 참사로 진작 물러났어야 할 윤 청장은 더 이상 경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위촉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에게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 등록기준 미달 소상공인 제재 유예하도록 법률 정비

16개 법률·4개 대통령령 개정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은 제재 처분을 유예하도록 16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목적의 '기상산업진흥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어장관리법' 등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는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 기준이 있었던 이들 법률에 일괄로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례로 목재생산업자가 기술 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 동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에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줬던 4개 법률 시행령도 유예 기간을 기존의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이행하고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돕는 법령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의원 코인 전수조사 조치 즉각 이행"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권익위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출을 비롯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가상자산 자진 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확인한 후, 의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을 봤다"면서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동의서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할 일은 말 잔치가 아니라 여야가 약속한 전수조사 즉각 실행"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게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5·18 헌법 수록·군공항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이 1일 열린 민주당 제13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실천과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서,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개헌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병훈 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이 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란히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다"면서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이런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오섭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사고 발생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